

국힘 의원총회서 당헌 개정안 추진

최고위원 4명 궐위 비상상황 규정

조만간 전국상임위 열어 의결

권성동 거취 등은 결론 못내

국민의힘은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진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당헌 개정안 의결을 위한 상임전국위를 소집해 가급적 추석 연휴 전까지 새 비대위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진행된 의총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형수·양금희 원내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의총에는 총 115명의 의원 중 87명이 참석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를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96조1항 개정안

에 대해 의원들이 박수로 추진했다.

앞서 법원이 당의 '비상상황'을 인정하지 않아 이준석 전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만큼,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상 '비상 상황' 요건을 구체화하고 나선 것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당헌 개정안과 관련, "의총에서 의결할 사항은 아닌데 다만 의총에 보고하고 거기서 추진 형식으로 의견을 모으면, 그걸 상임전국위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 의총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상임전국위 소집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그건 오전까지 서 의장의 입장이었고 의총에서 총의를 모은 이후의 입장 표명이 아직 없었다"며 "당의 법률자문위, 당 기획조정국에서 서 의장을 돕고 이 상황을 설명드리고 상임전국위를 열어줄 것을 부탁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헌에는 상임전국위 4분의 1 이상의 위

원들이 상임전국위 소집을 요구하면 의장이 소집한다고 돼 있다"며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니라 소집한다고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서 의장도 충분히 생각할 거라 본다"고 했다.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 문제를 두고는 공개 발언을 한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전체적으로 오늘 발언한 의원들은 권 원내대표의 사퇴 문제는 본인이 어찌 비대위에서 말했듯, 이 상황을 수습하고 난 이후에 거취에 대해 (입장) 표명 하겠다고 말할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해주는 게 옳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몇 분을 제외하고는 사실 끝까지 당을 수습하고 난 이후에 거취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좋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 다수였다"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 최고위원들 취임 첫날 '장관 동시 탄핵' 꺼냈다

김건희 여사 특검 강행 주장도

일부서는 '여론 역풍' 신중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김건희 특검'은 물론 '한동훈-이상민 탄핵' 카드까지 거론하면서 갖출 법한 새 지도부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친명계인 서영교 최고위원은 지난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동시 탄핵'을 주장했다.

여기에 친문 출신 고민정 최고위원조차도 "마지막 수단이 결국은 장관 탄핵인데 그 부분까지 문을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최고위원 취임 일성으로 '장관 탄핵'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일각에서는 강성 당원들을 의식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왔다.

당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장관

탄핵 주장은 거대 야당으로서 새 지도부가 이렇듯 강한 선명성을 갖고 있다는 엠포"라며 "여당의 자중지란을 틈타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이상민 동시탄핵'은 당초 강경파 초선 김용민 의원이 7월 말부터 주장했다. 당시만 해도 8·28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당내 공감대를 사지 못했지만 전대 결과 친명계 강경파가 최고위를 장악하면서 다시금 불씨가 되살아난 셈이다.

친명계 강경파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당내 '한동훈 탄핵' 주장과 관련, "어찌 됐건 한 장관이 법을 위반한 것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강경파 최고위원 사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 강경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한 최고위 관계자는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

울 필요도 없다. 법사위에서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며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과거 주장했던 특검 사례를 모으고 있다"라고도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라디오에서 '김건희 특검이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특검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 무계 중심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강경파의 '장관 탄핵' 및 '김건희 특검' 주장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일반 여론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수를 뒀다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시 불었던 여론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카드를 썼을 때 한 장관을 제2의 윤석열로 키워줄 수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시 민선 8기 첫 공공기관장 회의 강시장 '창의와 변화 5대 방침' 제시

광주시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주재로 민선 8기 첫 '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민선 8기 시정방향에 따른 공공기관 운영과 혁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시 산하 26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강 시장은 "그간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질타와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 등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음에도 공공기관의 노력이 시민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면서 "높아진 시민들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

하기 위해 공공기관 설립 취지를 되돌아보고 '변화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일을 주면 받고, 기관에서 사업을 올리면 추진하던 수동적 관계를 벗고, 시정운영의 협력적 동반자로서 새로운 관계가 필요하다"면서 기관 간 중복·유사 기능 재조정과 협업사업 강화, 경쟁 방식 전환, 인사·보수·회계 등 공통 표준지침 마련, 인사 검증 시스템 강화와 윤리규정 정비, 확실한 인센티브 제도화 등 '창의와 변화의 5대 방침'을 제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명진 시의원, 감염병 전문병원 조속 추진 촉구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명진 의원(서구2)은 30일 "광주시가 추진 중인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명 의원은 이날 열린 광주시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감염병 전문병원 지원 사업을 위해 2019년도부터 교부된 예산 중 공사비 등 64억원이 미집행돼 반납하는 실정이다"면서 "내년 개원을 위해 총사업비를 조속히 확정해 하반기 실시설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명 의원은 이어 "예산이 불용 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은 지난 2018년 조선태병원 운영자로 선정됐으며, 국비 414억원과 자부담 32억원 등 446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당초 내년에 문을 열 계획이었으나 사업 계획적 정성 검토와 교육부의 승인 절차 등 행정 절차가 1년 이상 진행되면서 광주시가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게 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반납한 국비 포함 127억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확보했다"며 "현재 중간설계를 마쳤고 총사업비 등을 조정해 올해 안에 실시 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진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희재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희재(여수) 국회의원은 30일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부모의 빚이 더 많을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정승인 덕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고, 과도한 빚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을 받을 당시 정확한 채무 관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한정승인제도 역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과도한 빚을 그대로 떠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 상속채무에 대해 인지한 경우, 성년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성년이 된 이후 상속채무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더라도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희재 의원은 "현행 제도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가혹한 삶에 빚이라는 고통까지 얹어주는 꼴"이라며 "‘빚 대물림’이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어, ‘빚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야 '중부세 완화법' 줄다리기...공제액·가액비율 대립

여야가 30일 '1주택 중부세 완화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중부세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문제가 여야의 대립 지점이다.

정부·여당이 이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그대로 두고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1억원 올리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

(60%)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특별공제 금액을 올리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 100%로 하기로 한 것을 40%나 낮춰서 60%를 적용하도록 했다"며 "그것으로도 충분히 중부세 완화라는 취지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점예하게 맞서고 있으나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에 서로 부담을 느껴 합의안이 전격 도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연합뉴스

회사 사정상, 매매

- 1. 대인동 156평, 신안동 176평
-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 4. 매매 - 평당 1300만원씩

문의. 010-3605-5000

투자하실분, 덕남동 임야

- 임야 200평,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도로접함, 개발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400만원(조정가)

문의. 010-3605-5000